

# “나라슈퍼 검찰 수사 ‘부적절’ ”

〈1999년 원주 삼례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 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 미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압적인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이 이뤄졌고, 이후 미진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원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말한다. 최초(당시 19)씨, 임모(당시 20), 강모(당시 19)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 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감압적이고 미진한 수사, 사건 처리 부적절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 당사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3명에 대해 폭행과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이 나오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당시 3명의 연령과 지적 수준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진술 내용이 나 요지가 그대로 반영돼 작성됐다고 보고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현장감 증 조서 등도 역시 실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부

분이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 과정 역시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특징과 3명의 특징이 유사한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같은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3명의 지적 능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기존 수사가 진행됐던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던 점 또한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정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기존 수사검사에 사건이 배당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

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함에도 기존 수사검사에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수사 과정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란 수사단계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필수로 하는 제도 마련도 권고했다. 진술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 ▲검사 및 수사관의 사건 기피, 회피제도 도입 ▲별개 검사가 기록 일체 교차 검토해 상호 전문토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강석훈 기자

## 온두레공동체, 예비학교에서 쉽게

### 전주시, 입교색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람이 중심이고 주인공이 되는 2019년도 전수형 온두레 공동체 육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2019년도 온두레 공동체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예비학교 입교식을 가졌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전수형 공동체 사업으로, 시는 올해 70여개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예비학교는 온두레 공동체 사업 신청에 앞서 관심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구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전수형 공동체 사업 이해하기 △공동체사업 계획 및 사업예산 컨설팅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및 보조금 사업 실무 등 접수부터 정산까지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시는 예비학교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본 사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더불어 사는 전주시를 구현하고자 추진 중인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사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예비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281-9323, 9334)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 대포차로 팔아치운

### 포크레인 훔친 형제 입건

‘불법명목차량(대포차)’으로 포크레인을 팔아치운 뒤 구입자를 찾아내 훔친 형제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임실경찰서는 “나무를 뽑아달라”며 포크레인을 부른 뒤 차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포크레인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모씨(37)와 B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임실군 관촌면의 한 마을에서 포크레인 기사 C모씨(41)를 불러 식사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시가 2400만원 상당의 포크레인을 견인 차량에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피탈에서 돈을 빌려 포크레인을 구입했으나 연체금과 할부 납부 독촉을 받아 지인에게 ‘대포차량’으로 팔아치웠다. 이어 지인이 포크레인을 팔았다는 것을 알아내고 구입한 C모씨에게 접근해 “나무를 뽑아달라”며 불러낸 뒤 A모씨는 C모씨에게 점심먹자며 식당으로 유인하고, B모씨는 견인 차량을 이용해 포크레인을 창고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명목차량(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알리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조사결과 이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담판과 인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A모씨는 “일래 내가 불던 포크레인인데 금전적인 문제로 지인에게 팔았다”며 “지인이 C모씨에게 포크레인을 판 것을 알고 찾아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형제는 처음부터 포크레인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여죄가 있는지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전동킥보드 훔친 7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4시 34분경 익산 시내 한 원룸 앞 골목에서 B모씨(23)가 세워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전동킥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전주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민족 대표 명절인 설을 앞두고 23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설맞이 생산품 이동장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금품 선거사범은 중범죄인만큼 가장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그동안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이 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제가) 210명의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면 그만큼 소문도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인 제가 일부 사람에게만 선물을 돌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크지만, 박씨를 통해 명절 선물을 돌리고 여유를 즐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 법원, 조재범 선거 공판 속행 거부

### 재판부 ‘성폭행 별개, 상습 상해만 인정’... 30일 항소심 공판

법원이 소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23일 검찰이 심 석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공판 속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거부로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

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심 선수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한 두 번도 아닌 일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선수와 그의 가족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길만

이 조 전 코치 본인이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죄를 인정해 심 선수를 고통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 조 전 코치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등 지도하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에서 심 선수는 직접 공판에 출석해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개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한편,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 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 AI 육성 집중

### 전주시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9년도 사업설명회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 ICT산업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3일 진흥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 IT/CT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진흥원은 올해 정부 혁신성장전략에 맞춰 빅데이터와 AI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역량강화 교육과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진흥원 ICT융합사업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ICT융합 분야인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과 2018년 AI기술 사업으로 추진한 ‘큐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지능 대화형 민원서비스 개발’, 빅데이터와 AI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SW제품상용화사업’ 등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진흥원은 또 지역 SW산업 육성 거점 기관으로서 지난 20년간 지역SW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를 위해 추진해 온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과 지역 SW의 품질향상을 위한 KOLAS인정기관 구축 운영사업, 사물인터넷(IoT)산업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ICT디바이스랩 운영사업’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스마트 창작터’ 등을 소개했다. /송호철 기자

특히, 정부의 데이터 · AI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부응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올해는 AI분야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역 내 ICT산업 방향에 맞춰 인력 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첨단 ICT산업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은 올해 ‘2019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VR · AR(가상 · 증강현실)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창업 · 벤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과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및 해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대(對)아시아마케팅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여기에, 신성장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K-ICT 3D프린팅 전북센터 운영 및 3D프린팅사업과 기술개발 확산 △3D프린팅 지역센터 활성화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사업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사업 △전주융합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사업 등도 추진한다. /송호철 기자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

전주시가 전주지역 67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돌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전주시드림스타센터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67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각 시설별

정보를 공유했다.

장철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이날 “아동친화도시 전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소통의 시간이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 전주시, 내달 1일까지 설 대비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를 숙여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23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 · 대형할인마트 등 45곳을 대상으로 농 · 축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 · 축 · 수산물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산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대추와 밤, 꽃감, 도라지, 고구리, 표고버섯, 조기, 소고기 · 돼지고기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과 수산물,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